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4건)

- ① [새 정부 업무보고] “국민권의 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22.8.23)
- ② 국민권익위, 국민과 공직자 24만명에게 공공기관 청렴수준에 대해 묻는다 (22.8.11)
- ③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 역량 강화 위해 청렴윤리경영 교육 나선다 (22.8.10)
- ④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위해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공공기관 14곳 선정(22.8.8)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새 정부 업무보고] “국민권의 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민생 고충 최우선 해결,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22. 8. 23. 국민권익위)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주거·복지·금융민원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집중 해결하고, 소외지역·취약계층의 생활고와 영세·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청취하고 해소한다.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기관·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하는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상향하고,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 또는 지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생 고충을 최우선 해결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23일 서면으로 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금융 관련 민원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집중 해결하고, 대통령실 접수 서신민원 중 취약 계층 생활고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처리하는 한편, 최근 3년간 20.0%였던 고충민원 인용률을 올해 21.3%까지 높인다.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기관·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민원 접수 초기에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른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한다.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한편,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회계, 건설, 의약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관, 체험관, 교육관, 이벤트관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체험관’을 본격 운영한다. 2024년까지는 체험관에서도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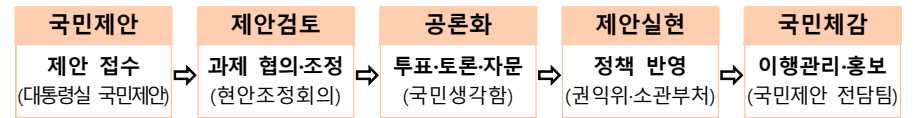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도입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청구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심판사례도 제공한다.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서 검토해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생각함에서 추가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발굴·개선을 지원한다.

또 ‘국민제안 전담팀’을 운영해 국민제안에서 발굴한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변화를 만든다.

[국민제안 정책반영 과정]



연 2천만 건의 민원이 처리되는 디지털 플랫폼 ‘국민신문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원패스 기능을 도입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또 현재 1,100여 개의 연결기관을 사립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2,000여 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민의 관심이 큰 현안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며, 2024년까지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대응 및 피해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오는 10월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21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한 관사 운영, 공직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현행 국가자격시험 제도 등 공직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반기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공직자 대상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행위규범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총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반부패 노력 성과를 평가한다.

* 중앙행정기관 46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199개 등(2022년 기준)

모든 공직자가 연간 2시간씩 의무 이수해야 하는 청렴교육의 기관별 실효를 점검하고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등을 실시한다.

공기업 등의 경영활동과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개발·보급해 기관의 자율 실천을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까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해 혼란을 예방한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보상금 지급요건 등

비실명으로 변호사를 통해 부패·공익신고를 할 때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신고에서 조사·수사·재판 등으로 확대한다.

현행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률(4%~30%)을 정률제(30%)로 통일하고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조정·폐지한다.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한 자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지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표한다.

작년 기준 총 402조원에 달하는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신고 및 처리현황 등을 ‘청렴포털’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별·예산사업별 부정수급 비율과 환수금액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각 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빈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08개 기관에 대한 환수·제재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환수하도록 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편,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요약)

권익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핵심과제 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 (총괄기능 강화) 각 기관 민원처리 품질 제고, 현장중심 민원해결 강화
- (집단민원 조정) 대규모 집단민원 적극 조정·합의,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활성화
- (촘촘한 권익보호) 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국방·경찰음부즈만 강화

핵심과제 ② 쉽고 편리한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 (원스톱 행정심판)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일원화
- (독립성·전문성 강화) 행정심판위원 신분보장 강화, 위촉분야 확대
- (신속·편리한 서비스) 'EASY 행정심판' 기능 제공, 메타버스 체험·홍보관 개설

핵심과제 ③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제안 정책화) '국민제안' 우수제안 발굴, 최우선 정책반영 및 관리·홍보
- (빅데이터 분석) '국민신문고' AI신기술 도입, 국민안전 민원예보·제도개선 연계
- (제도개선·적극행정) 제도개선으로 부패·고충 예방, 적극행정 국민신청 기관 확대

핵심과제 ④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

- (불합리 관행 개선) 채용비리신고센터 설치, 방만 관사운영·불공정 국가자격시험 개선
- (공공부문 청렴 제고) 반부패규범 운영 내실화,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평가 실시
- (청렴문화 확산) 맞춤형·법정청렴교육 강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전파

핵심과제 ⑤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고체계 및 보호·보상제도 구축

- (신고 활성화) 부패·공익신고 변호사 대리범위 확대, 이슈 현안 집중신고기간 운영
- (공공재정 누수 근절) 청렴포털 활용 부정청구 관리, 빈발분야 기획 실태조사
- (보호·보상 제도개선) 5개법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통합, 신고자 보상금 상향 등

공통과제 ①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 (반부패 규제 합리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기준 정비, 온라인 대리신고 확대
- (정부 규제혁신 지원) 국민제안·민원빅데이터 분석, 현장의 규제성 민원 해소
- (적극행정신청·소극행정신고) 규제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

공통과제 ②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위원회 정비(2개중 1개, 50%)

- (행정심판통합)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일원화

국민권익위, 국민과 공직자 24만 명에게 공공기관 청렴수준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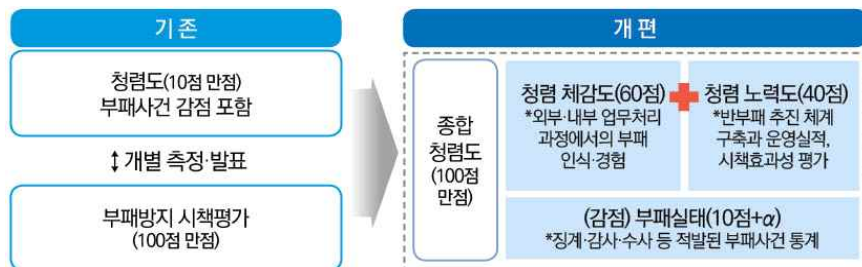
8월부터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22. 8. 11. 국민권익위)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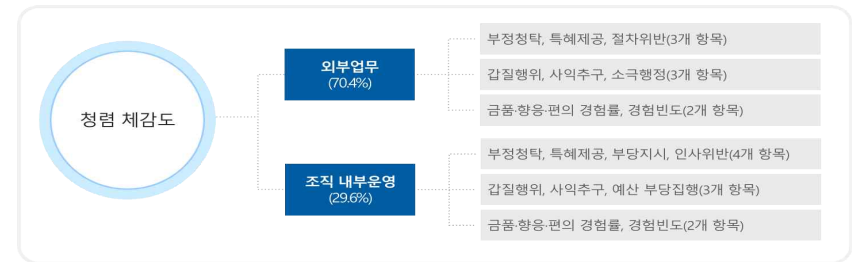
청렴도 측정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는 ▲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60점) ▲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점) ▲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10점+α)로 구성된다.



8월부터 실시하는 청렴체감도 평가는 크게 외부업무와 조직 내부운영으로 나눠 설문조사 방식으로 측정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사익추구 등 꼭 필요한 항목은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설문은 통합·제외하는 등 측정항목을 대폭 개편했다.

<외부업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게 부정청탁, 사익추구, 소극행정, 금품·향응·편의 경험 여부 등 총 8개 항목을 묻는다.

<조직 내부운영>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 예산, 일반행정업무 등 조직 내부운영 과정에서 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예산 부당집행 여부 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묻는다. 내부운영은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청렴체감도 측정은 전화 또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11월까지 이루어진다.

한편 청렴노력도 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11월에 제출받아 내년 1월까지 실시하며, 부패실태 평가까지 종합 합산한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3년 1월 중 1~5등급으로 발표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참여자의 응답으로

공공기관의 부패 수준을 진단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국민권익위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 역량 강화 위해 청렴윤리경영 교육 나선다

환경·사회·투명경영 및 반부패 규범 정착 위해
공공기관 맞춤형 청렴윤리경영 교육 운영

(22. 8. 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에 청렴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이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8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18회의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공직자들이 반부패 법령을 단순히 준수하는 준법경영을 넘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등 조직의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과정이다.

청렴연수원은 올 상반기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과 표준강의안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3개의 맞춤형 청렴윤리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기관장을 비롯해 상임임원 등 고위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고위직 과정’ ▲교통·안전·개발 및 인사·예산 등 분야별 담

당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유형별 과정' ▲윤리경영 및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등이다.

이번에 실시된 '제1기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은 국민권익위가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한 후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각 기관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42명이 직접 청렴연수원에 모여 청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내용으로는 ▲청렴윤리경영의 개념 및 국내외 동향 등을 설명하는 이론교육 ▲기획재정부의 윤리경영 표준모델 등 관련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에서 개발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에 대한 교육 등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아울렀다.

*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

또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 형태로 복습하는 '청렴윤리경영 골든벨' ▲각 기관에 적합한 청렴윤리경영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 교육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청렴연수원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 과정을 원내 집합교육 형태로 총 18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리적·시간적 제약 등으로 청렴연수원 방문이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총 14회 운영해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찾아가는 청렴윤리경영 교육 14회(기관별 방문교육 4회, 권역별 방문교육 10회)

붙임

제1기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현장 사진



청렴윤리경영 특강 현장 사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위해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공공기관 14곳 선정

청렴윤리경영 교육 실시, 부패 취약분야 기관별
컨설팅 통해 개선 방향 제시

(22. 8. 8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기관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기관(14곳) >

구분	기관명	
공기업	시장형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한국철도공사, 한전케이피에스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방공사·공단	서울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6개 공기업*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4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선정 심사에는 한국투명성기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이번 시범운영은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선정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청렴 수준 진단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 기관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채용비리, 회계 부정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